

# '꼼수 증세' 우수수... 액상담배, 개미주식, 암호화폐까지

7월 세법개정 발표 앞두고 증세론 '술술'...오늘 논의  
코로나에 '재정적자 100조' 눈앞...사실상 증세 배정

'액상담배와 가상화폐, 주식 양도차익, 법인 증부세까지...'

정부가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는 세제개편을 연이어 예고하고 나섰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암호화폐에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나라살림이 더욱 압박해지며, 조세 저항이 심한 보편증세 대신 과세 형평과 선진화를 비뚤목으로 세입기반 확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인상 △암호화폐 양도차익 소득세 부과 △법인보유 주택 증부세율 인상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말 확정해 발표한다.

기획재정은 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 역시 검토 중이다. 증세 논란을 피하고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세법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도소득 '개미주식'도 양도세...거래세는 점차 인하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서울은 최대 33%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미'(소액투자자)일지라도 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다. 이 같은 선진화 방안이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내년 대주주 범위를 종목별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전체 개인투자자를 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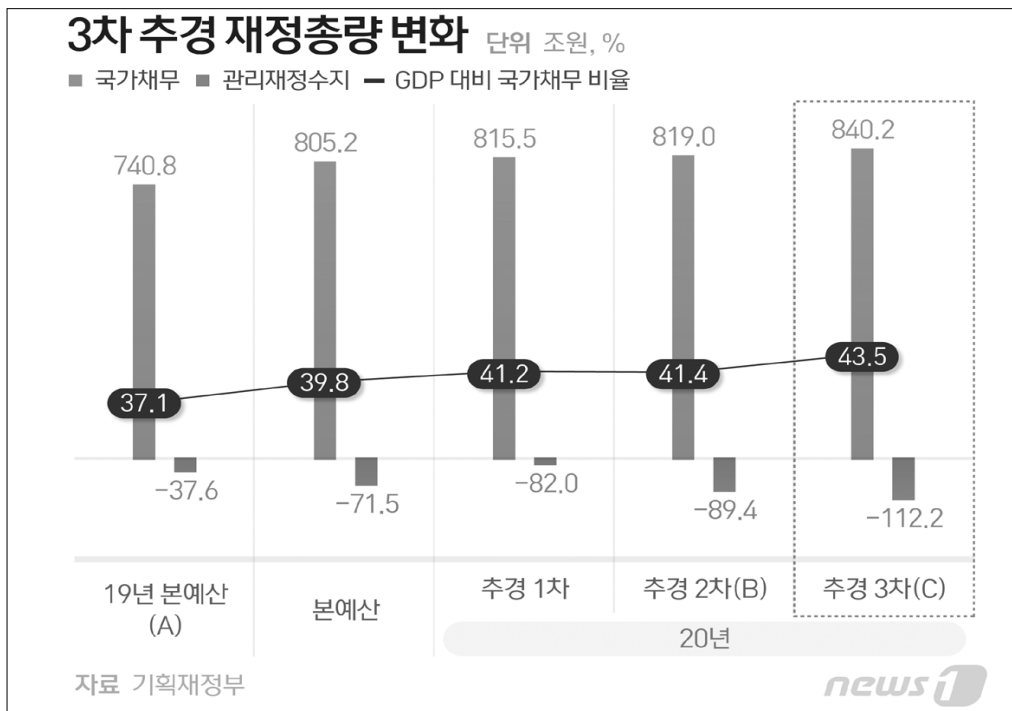
거래세는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중 과세나 중과,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을 사고 팔 때 내는 0.25%의 세금이다.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거래 자체에 세금을 물리는 터라 주로 단타 위주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매년 0.05%포인트씩 총 5년에 걸쳐 '제로화' 하는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문제는 세수 감소다.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 영향으로 평소 5조원 정도였던 규모가 올해는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절벽 우려에 직면한 정부로서는 거래세 폐지가 부담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거래세를 절반 이하로 낮추되, 제도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액상담배 값 오른다...인프라 갖춘 암호화폐도 과세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담뱃세)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4500원인 일반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3323원, 관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0.7ml)는 그 절반인 1670원이다.

이에 과세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지난달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 토론회가 열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은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도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관련법 미비로 개인의 암호화폐 차익을 무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올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얘기는 달라졌다.

개정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액 실명 확인과 거래내역 기록·보관·신고·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곧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는 이제까지 논의의 태도였다가 정부가 과세하는 방향으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0조 재정적자 우려에... '과세공백' 속속 메우는 정부

이러한 세입기반 확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올해만 3차례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했다. 총 추경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12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경기악화로 국세는 올 4월까지 작년보다 8조7000억원가량 덜 걷혔다.

세간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다. 이런 걱정을 덜려면 확장재정 추진과 중장기적 증세 논의를 같이 해야 맞지 않느냐는 의문도 내놓는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손사래를 쳐 왔다.

정부는 "증세"를 기존 세목의 세율인상 등으로 좁게 정의하는 모양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던 사각지대를 메워가는 것도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증세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현실화할 수 있다"며 "5년 정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증세보다는 기존 세입기반을 여러 방법으로 확충하려 한다"고 기재위에 답변했다.

뉴스1

##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공식 출마 선언

"WTO 협상 기능 복원·코로나 위기 공조"  
"중견국 위치서 연대·협력 리더십"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무역체계를 조율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신입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한다. 유 본부장은 WTO의 협상기능 복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의 국제적 위기대응 공조 등의 포부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들의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쟁의 길로 들어선다"면서 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새로운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분쟁해결 기능 실효성을 잃는 등 위기에 처한 WTO의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다"면서 "또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제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WTO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대립을 조율할 수 있는 중견국(middle powe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WTO가 21세기 통합환경에 맞게 개편되는 데에는 회원국들간 신뢰와 통합이 필요한만큼, 중견국인 한국이 이 부분에서 주도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WTO 사무총장에 나서는 후보도 내비쳤다. 유 본부장은 "25년의 공직생활 기간 동안 꾸준히 통상분야에서 일해 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WTO의 개혁과 복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WTO 본연의 역할인 협상과 중재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협상 기능을 복원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WTO 협정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 "분쟁해결제도와 전자상거래 등 국제규범의 재정비가 시급한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들의 요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도전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적 위기대응 공조를 선도하는 WTO로 그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의 출마 선언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총 5명이다. 다음달 8일까지 후보등록이 진행되는 만큼 후보자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로베르트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사임 의사를 표명하자 차기 사무총장 후보를 내놓기로 결정하고 후보군을 추려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유 본부장이 입후보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간 여성 WTO 사무총장 배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최종 사무총장 후보로 낙점이 되면서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에 도전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중으로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사무국에 유 본부장의 입후보를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 정부,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전국 172곳 6,8022가구 모집

정부가 25일부터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을 포함한 '20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172곳 6만8022가구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하반기에 2만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1만4706가구, 수도권 654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600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지속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 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확인하여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혼희망타운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 농촌협약 제도 추진 보성 등 9개 시·군 선정

농식품부, 내년 5월 협약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도입·적용되는 농촌협약 제도의 추진대상으로 총 9개의 시·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등이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365 생활권 조성'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제도 대상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5월 협약을 체결해 계획 이행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왔다.

오유나 기자

## 중소·소상공인 밀집지역도 '특별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확대·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에 위기가 발생할 때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요건은 그동안 산업단지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포항지진, GM 군산공장 폐쇄 등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특별지원지역은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 경사진 주차장, 12월까지 고임목 비치해야

개정 주차장법 오늘부터 시행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주차장

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주차장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 관리를 위해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

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 주차장은 물론이고 기존 주차장도 오는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을 비치해야 한다.

신봉우 기자